

새 천년의 보건복지 주요 정책과제



李 鐘 尹

보건복지부 차관

이제 며칠후면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긴 여정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끝에서 새 천년을 내다보며 우리 정서와 토양에 맞으면서 미래지향적인 복지모형과 보건의료환경을 개발·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구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새 천년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장미빛 미래를 예견해 주기에는 많은 미해결 과제와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꾸준히 확충되어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복지국가의 진입기에 접어들었지만 전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기에는 아직 급여수준이 미흡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되는 등 제도적 기본틀은 갖추었지만 위험분산기능이 미흡하고 적용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며,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선진국 경제구조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할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치료위주의 고비용·저효율 체계, 공공보건기능의 취약성,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천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선진국 경제구조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할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복지지출이 사회적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로 국민건강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술 발전과 보건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복지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과 평생건강이 보장되면서 아울러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동시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을 보장하여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 수준인 7,2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복지대상자 100가구당 1명씩 배치토록 하여 다양한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74세에서 77세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0%(503만명)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대폭 확대하고 노령연금과 경로연금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노인봉양가정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나

갈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선천적·유년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 5년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이 2010년에는 80% 이상 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 진정한 장애인의 평등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동의 학대 예방·방지와 안전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장애인·고령노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직장여성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복지시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공공전달체계의 책임성과 민간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연계·보완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관 등 민간복지기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수요 및 공급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민간복지지원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역량을 종합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민·자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자 비율을 2010년에 80%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토록 하고, 형평성 있는 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하며, 공·사연금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과 함께 의료보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여 의료보험 통합 초기의 단기적인 재정안정대책과 의료보험 재정통합(2002년 1월) 이후 중장기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건전 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자격관리·징수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관리조직에 계약제, 성과급제, 개방형제 등 인사·보수체계의 혁신방안을 도입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를 억제시키고 임산부 산전진찰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하며,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 의무화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당뇨병·간염·결핵 등 5대 주요 질병에 대해 국가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병원·종합병원간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중소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의료인력을 공급하여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를 170명 수준으로 유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환자사망률과 장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구급차량이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되도록 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을 정교히 고안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급체계를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법규 및 관련제도를

규제관리차원에서 자율경쟁유도차원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보건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전통한방의료의 발전을 통해 양·한방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효율성이 높은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하고 충북 오송에 276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2006년까지 조성하여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종합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학·연·정부의 협조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새 천년을 맞아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00년대 우리 보건복지 모습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이나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아 중산층이 육성되고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향상된 활기찬 삶을 누리는 선진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나누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력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실로 구현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운명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 맡겨진 소중한 사랑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그 노력의 결실이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비전을 구체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우리 모두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